

2008 지방재정 세미나

개 회 사

김 국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오늘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8 지방재정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삼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님**,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님**, **윤석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분야별 과제를 맡아 말씀을 해 주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면서, 지방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재정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해주시는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방발전의 비전을 ‘**실천적 지방자치**’와 ‘**자립적 지역경제**’로 설정하고, 정책방향으로서 **첫째**,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역간 공동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추진, **둘째**, 4대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충과 자치단체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셋째**, 지방 4단체의 법정기구화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에 의사소통 활성화와 자치단체의 국정참여 제도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예산의 총량규모가 120조원 시대에 들어서고 있고, 그 비중도 중앙재정을 능가하게 되어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의 중추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된 지방재정 부문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의 근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는 어려운 여건과 일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 지역내 자원배분의 자율성 제고는 물론,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살리고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해 왔고,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 실시를 기점으로 양적·질적인 변화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지고, 그 구조와 운영방식도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환경적 여건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지방재정 부문의 취약성은 계속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유가·고물가로 초래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어려움, 복지지출 증가 등 날로 팽창하는 재정수요, 국가의 이전재원에 대한 과잉기대와 일부 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영 등은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수요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재정의 패러다임도 재정운영의 관점에서 성과와 실적중심의 지방경영으로 전환되고 있고, 한미 FTA 등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시장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쟁의 단위가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세계화의 패러다임에서 재조명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재정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은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에 기초한 자립적 발전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창의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의 쇄신과, 효율성과 건전성 그리고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구조의 합리적 재설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 활동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의 성과가 지방세수 증대로 환류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경제에 대한 지출확대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로 이어져서, 결국 지역경제 활동과 지방재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는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 활동을 더욱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은, 현실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교한 분석, 문제해결에 있어서 관념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이번 세미나의 대주제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로 설정하고, 지방재정의 현안인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 교육재정의 지방부담 분석, 예산절감 대책 등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최적의 발전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드는 선진 일류국가’¹⁾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논점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다양하고도 생생한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가 개진됨으로써 지방재정이 한 단계, 더 높게 발전될 수 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을 자랑하고, 자연·생명·문화·전통이 어우러진 생태문화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이곳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유익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행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과 학회 회원여러분, 그리고 세미나장을 가득 메워주신 지방재정 발전의 진정한 주역이신 지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9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 국 현

1) 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업무보고(2008. 3. 15)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활기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겠다고면서, 이와 같이 선진 일류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내용임.

2008 지방재정 세미나

축 사

원 세 훈

(행정안전부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이삼걸입니다.

먼저,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지방재정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 **윤석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
금일 행사를 더욱 빛내주신 **김완주 전라북도지사님**, 아울러 늘 지방재정발
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주시는 학회 회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지방재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재정의 규모와 위상을** 제고하였고, 2005년에는 **지방재정법**
재정법 · 계약법 · 기금법 · 공유재산법 등 4개로 분법하여 지방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채 개별승인제도의 폐지** 및 **총액한도제 도입**, **지방예산 편성지침의 폐지**,
중앙 투 · 융자사업의 심사조건 완화 등 자율성 강화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주민참여**
형 예산편성제도와 지역공사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로 인해 국가 의존성이**
심하다는 점, **자치단체간 심각한 재정불균형**, 강화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의식이
확보되지 못하여 나타나는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등이 그것입니다

이제, 지방재정은 거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지방재정의 패러다임은 **재정관리의 관점에서 성과 · 실적 중심의 지방**
경영으로 전환되고,

고령화, 사회양극화에 따라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중앙의 지원여력은
한계에 봉착해, 이제 **자치단체 스스로 예산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
입니다.

변화의 시기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차분히 되돌아 보고, 새로운 관점과 접근틀로 시대 변화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과도기·전환기적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이라는
금일 세미나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것도 새정부의 역점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의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의 동반자로서, 분권지향형 정책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별 특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발
전을 견인하는 소중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원 세 훈

2008 지방재정 세미나

환영사

김완주

(전라북도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박 정부 원년을 맞아 지방재정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2008년도 지방재정 세미나』를

태권도의 성지 무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세미나가

우리 도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윤석완 한국지방재정학회장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각 시도의 재정분야 공무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고유가 대책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불균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지방세의 세원은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지방의 재정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은 세수의 취약성과 자체수입 발굴의 한계로
국가재원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세원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검토하고
광역경제권 설정에 따른 광역특별회계 설치,
지역발전 교부세 신설 추진 등
지방재정 운용의 틀을 재정립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여전히 재정권과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지방재정의 자율과 자립은 없어지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도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등
그 동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정책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지방은 발전 전략 수립과 정책 구상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함께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특별회계,
지역발전교부세 제도 등이
배분방식에서 지역의 낙후도가 반영되고,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와 재정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통해
지방재정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와 국가발전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박 2일 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북의 아름다움과 태권도 성지의 기를 듬뿍 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를 방문해주신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님과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9일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

2008 지방재정 세미나

환영사

홍낙표

(무주군수)

2008년도 지방재정세미나에 참석해주신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님들을 비롯한 지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재정 발전을 주도하고 계신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과 내일 개최될 지방재정세미나를 통해 지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재정정보가 공유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지방재정은 자치단체의 살림인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방안 모색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들이 공유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하고 현실적인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실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무주군은 태권도공원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무주를 향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세미나 역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모으는 기반이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가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9일

무주군수 홍 낙 표

2008 지방재정 세미나

기 조 연 설

윤 석 완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지난 5년간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의존재원 중심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저하 되었으며, 지방재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12년이 지난 현재 지방재정규모는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세입규모면에서 보면 1995년 36조 6,643억원에서 2007년 111조 9,864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규모는 1995년 15조 3,169억원에서 2007년도 38조 732억원으로 2.5배 증가한 반면 이전재원의 규모는 동기간에 11조 6,539억원에서 42조 5,673억원으로 대략 3.7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확대가 지방세보다는 주로 이전재원의 확충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이전재원에 의존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경제활동에 대한 과실이 지역에 귀속되어 지방세수를 증가시키고, 그 증대된 세수가 지방재정지출을 증대시키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의 순환적 상승 메커니즘 기능이 상실되어, 재정구조가 이전재원이 비대해진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지역간 경제 및 재정격차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재원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여 주민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에 살더라도 일정한 행정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재원은 자본주의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전재원의 운영은 지방세수 기반확충과 더불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전재원제도는 그 기능이 저하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들은 첫째로 이전재원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세수와 지방재정지출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기본적인 행정경비 부족에 대한 불충분한 자원보전과 사회복지 등 국가정책 내지 의무적 사업에 대한 과중한 지방비부담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현행의 이전제도는 주로 형평화 기능 강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기능이 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과 자주성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재원배분에 있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재정형평화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총세입에 대한 자체수입 비중이 1995년 70.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2007년에 58.9%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정부간 이전재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재정 확충이 이전재원 중심으로 전환되어, 징세노력을 등한시 하거나 주민의 조세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지출을 하는 등과 같은 재정책임성에 대한 유인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에 현재의 이전재원은 규모가 기형적으로 커진 반면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저하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전제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재원의 개편은 우선적으로 비대해진 규모를 축소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대해진 이전재원의 규모 축소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순환적 상승 메커니즘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여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지방세제도가 개편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재원의 규모축소와 지방세수 증대에 대한 재정제도 개편은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 문제 그리고 재원보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이전제도임을 감안할 때, 형평화 기능이 강조된 이전재원제도는 지방자치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재원제도도 궁극적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 또한 지역발전과 연계된 기능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의 이전재원제도는 이러한 형평화 기능과 지역발전과의 연계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이전재원제도는 주로 형평화 기능을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기능이 약하여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승적 순환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이전재원의 연계기능 강화는 현재 제도안에 분산 내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재원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 기능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개편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형평화기능 중심과 지역경제활성 기능 중심의 이전재원제도 확립은 각 이전재정제도 간의 불분명한 정책목표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소망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개편과 함께 스스로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재정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자구적인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 합니다.

예산절감은 대주민 서비스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지 않는 인건비, 경상비 등 내부경비 우선 절감과 유사 및 중복사업 통폐합, 운영과정개선을 통한 투입비용 축소 등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민간경영기법이 도입되어 원가의식과 인센티브제도 등과 같은 방법이 활용될 때 예산절감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창의와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주민의 추가 조세부담 없이 기업유인을 위한 감세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투자사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원의 내적증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절감에 의한 재원의 내적 증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수와 이전재정의 균형화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여를 하여 이전재원의 규모를 적정화 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예산절감은 지방자치단체가 외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내적으로 증대시키는 효과와 공공부분에 창의와 혁신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산절감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예산절감 노력은 과다한 선심성·행사성 경비지출과 나눠먹기식 예산편성,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경비지원 등과 같은 방만하고 낭비적인 지방재정운용이란 지적을 불식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켜 자주재정 운영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효율성 그리고 운영의 책임성이 달성 될 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의 지방재정제도는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서 보다 자유롭고 넓게 사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때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확립되고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기조연설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6월 19일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윤 석 완